

■ 主題論文 要略 (Abstract of Papers)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 정책

이 승 주

(국립중앙도서관)

1. 전환기와 도서관의 위치

현대사회를 일컬어 벌써 정보사회라고들 한다. 이것은 Daniel Bell의 「고도로 공업화된 사회는 탈공업화 사회로 이행한다」는데서 비롯되고 오늘날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소위 탈공업화사회(Post Industrial Society)의 특질로서 (1) 썩어비스경제의 창출, (2) 전문적기술계층의 사회적 우월, (3) 혁신과 정책형성의 원천으로서 지식의 중심적 역할, (4) 자립적 기술성장의 가능성, (5) 새로운 지식테크노러지의 창출 등을 들고 있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주어진 주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정책」이란 긴 제목가운데 「정보화사회」란 바로 이 탈공업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도서관정책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탈공업화시대에 있어서도 도서관이 오늘의 양태로 존속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하나의 환상적 Fiction 같아 본인 자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는 터이며 오직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이 문명의 변화과정에서 일대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속에서의 상황인식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과 「현대문명」이 차지하는 위치와 받고 있는 Challenge는 또 다르다는 것이며 그 목표설정에서 따라 문명수용 내지는 발전의 전략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경제는 후진국으로부터 중진국으로 발돋움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것은 하나의 발전 Process이다. 그런데 이 선진국이란 일단계가 고도로 또는 공업화된 단계인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란 것이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Horizon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탈공업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전환기에 있어서 어디에 국가발전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발전의 전략목표를 두느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문명과 역사는 비약할수 있는가?」「오직 제 갈 길을 갈 뿐인가?」의 명제에 귀착되며 이에 따라 국가의 정책내용은 달라지게 된다. 국가의 정책결정이란 바로 정책목표와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러면 과연 도서관문제가 고도의 산업사회이든 탈공업화사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든 예외적으로이든 국가의 정책으로 다루어질 정도로 정책대상이 되는가? 문제가 된다. 우리는 여기에 서슴치 않고 「YES」를 답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대학도서관으로 하여 근대화이 싹이 텄고 공공도서관과 더불어 근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전문도서관의 역할이 큰 구실을 하게 될 것을 전술한 Daniel Bell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잘 알수있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도서관정책을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국가적 레벨에서 재조정계획하고 또 이를 중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오늘날 많은 미래학자와 사가가 말하는 것처럼 탈공업화사회가 정보사회라면 실로 국가의 평화와 발전은 도서관의 발전 여하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또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는 새시대의 담당자로서 사회의 꽃이 될 것도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오늘날 감당기 어렵도록 수많은 정보의 홍수를 눈앞에 보고 있고 또 이를 회심의 기쁨과 야망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2. 국가의 도서관정책

앞서 본인은 도서관문제가 국가의 정책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YES」라고 언급한바 있다. 오늘날 도서관은 Conservation 과 Development 의 두가지 주요기능을 갖고 있다. 과거엔 Conservation의 내용이 도서관에 국한한 Storage function 이 있었고 또 그 범위가 도서관자체에 그치었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전문명 내지는 문화의 Conservtion 으로 확대되고 또 이를 국가레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본질적 차이를 갖고 있으며 다른 한편 문명의 Conservative 한 Aspect에서 뿐만 아니라 Developmental Aspect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 적극적면은

찾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이 갖는 제기능의 국가정책적 중요성과 효과성이다. 도서관의 문화기관으로 갖는 그 기능의 다양성과 일반성 때문에 그 정책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나 다음과 같은 정책의의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도서관정책적 의의와 효과, (2) 정보정책적 의의와 효과, (3) 문화정책적 의의와 효과, (4) 문명정책적 의의와 효과, (5) 교육정책적 의의와 효과, (6) 사회정책적 의의와 효과, (7) 공보정책적 의의와 효과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해서 세계각국은 새로운 국가체제를 갖추고 정책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 캐나다, 불란서 등 단일국가는 물론 심지어 주정부의 권한이 센 미국, 호주와 같은 연방광역국가에서도 도서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의 강력한 도서관정책에도 자극 받은바도 있지만 그 보다는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과 미래에 대한 대응책으로 취하여진 조치인 것이다. 심지어 비올빈이나 월남이 제도상으로 우리보다 훌륭히 갖추고 있고 마래지가 1968년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장을 초빙 The Blue print for Public library deaplopmnt in malaysia를 완성 년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웃 일본이 제도적 재원과 아울러 도서관 발전에 새로운 주력을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 우기 북한 평양의 중앙도서관이 좁 낡은 통계로도 150만권의 장서를 갖고 있고 각도에 도립도서관을 옹하면서 각 공공도서관의 입체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국가이념과 사회체제가 다르고 전체주의적인 강력정치를 한다 해도 우리에게 「뼈아픈 각성」을 아니할 수가 없다. 또 인구 280만인 뉴질랜드의 국립도서관이 350만의 장서에 매년 우리는 13억원(NZ\$250만)을 쓰고 있고 연간 총수입 10억달러속에 3000만달러가 도서수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선진문명수입에 등한히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안타깝기 그지 없다. 후진국인 인구 3000만인 우리가 연간 100만달러 내외의 돈을 도서수입에 배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해도 정책적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른 한편 미국의 국회도서관만도 연간예산이 8,700만달러(한화 348억원)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예산이 1억1천만원이니 3백10분의1도 미달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Libravy of Cmgress는 MARC System (Macchine Readable Catalaguing)을 개발 정보시대에 대비하고 있고 영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여러나라가 이에 가입 매2주마다 MARC Tape를 공급받아 문명정보의 공급에 항구적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도서관에 관한 대책은 긴급한 것이다. 여기에 본인은 T.S. Eliot의 「Where is the information we have ost?」라고한 개탄을 상기하고 싶다. 상술한 의적요전도 그러려니와 국내수요의 학술 및 산업정보의 공급과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해위서도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은 재고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의 반성과 그 방향

모든 국가제도 내지 사회제도는 그 자체 확실하고도 합리적 법적 근거를 갖어야 한다. 해방이후 우리 도서관계의 이에 대한 염원은 1963년의 도서관법의 제정으로서 일단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도서관에 대한 정책 Visicin이 명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력수단을 결여하고 또 도서관의 국가행정체제의 제도화에 실패하고 있어 공허한 법이 되고 말았으며 오늘날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다른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 보아도 공공도서관을 예로 볼 때 정부에서 입안추진되는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 계획이 성공적인가 아닌가를 본인은 알 길 없지만 해방후 42개의 공공도서관이 현재 70개로 늘었다고 듣고 있지만 이것이 발전인가? 아닌가?도 검토의 여지가 있으며 운영면에서 문제점은 심각한 일이며, 또 과연 도서관법 제정 이후 국민의 도서관 이용과 독서경향은 향상되었는가? 그리고, 동법 제1조 목적에 천명된 「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



(주제발표 하는 이승주 선생)

의 발전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법 공포후 이제 10년. 냉엄한 반성과 지혜롭고 신중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독서관제도 확립에 정부당국과 도서관인은 전면적 도서관법의 개정에 힘을 도아야 할 것이다. 우선 그 기본방향으로서 사전을 들면 제도면에서

- (1) 법제상으로 현행과 같이 단일법체제로 할 것.
- (2) 도서관행정의 주무부서는 문공부로 하며, 주관부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문공부, 공공도서관은 내무부, 학교도서관(대학, 중고교, 국민학교)은 문교부로 소관토록 할 것.

도서관의 입장에서 본 독자의 읽을 권리

- (3)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고유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것.
- (4) 국립중앙도서관을 핵심으로한 국가적인 협조체제를 수립할 것.
- (5) 국회도서관은 현행대로 분리시킬 것.
- (6) 국가문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정책면에서는

- (1) 국가도서관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 (2) 규장각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에 관리 전환하고 국가의 책서보전에 힘쓸 것.
- (3) UNESCO 기한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접수토록 할 것.
- (4) 중앙공보관을 제외한 지방의 공보관, 문화관 등은 당 지역 공공도서관과 통합시킬 것.
- (5)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National Lending Sewire를 강력히 추진할 것.
- (6) 도서관협회는 국가도서관제도를 연구 정부에 자문·건의할 것.
- (7) UNESCO 한국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두고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겸하도록 할 것.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상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의 기본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제시해 본 것으로 그 발전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부언을 요치 않는다. 이상 몇가지 요점을 가지고 본대회의 주제요지로서 삼는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본 독자의 읽을 권리

김 영 조

(서울특별시립중로도서관)

1. 금년은 유네스코가 「세계 도서의 해」로 선포한 해이다. 이 목적은 도서가 국가발전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이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데 있으며 나아가서는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정신 함양에 힘쓰도록 한 것이다. 「책은 만인의 것」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세계적인 규모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2. 도서가 인류문화의 전승도구로서 현대문명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중한 것이며 미래를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도서는 또한 인간 정신자원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이로부터 새로이 창조된 구원 지혜와 지식은 모든 진보의 수단이 됨으로서 도서는 국가의 발전을 지름길로 촉진시키는 필수도구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년 이래 눈부신 발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는 어떠한가? 경제위주의 발전이다. 경제성장에 따라 물량면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심각한 효과는 좋다고 하겠다.

물질문화의 발전은 그에 앞서 국민 개개인의 정신자세의 확립이 선행, 적어도 병행해서 경제개발을 위한 토대를 이룩해 놓아야 한다. 국가의 발전은 물량적 경제성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정신·물질 양면의 문화향상과 신장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룬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라 하겠다. 경제일변의 편중된 발전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지 않은가? 물질문화를 이룩해 놓을 수 있는 바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인간 정신이다. 풍부한 지력, 숙련된 기술,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의 계발은 도서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3. 출판이란 인류의 지식을 조정하고 유지, 보존 및 전파를 위해서 책으로 조형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복제되어야 한다. 출판이란 그가 지니는 문화적 가치와 국가발전에 대한 기여 다시 말하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달, 보급시키며 국민의 창조적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새 사회가 요구하는 새



(우제발표 하는 김영조선생)